

여야, 비쟁점법안 90여건 합의… 반도체특별법 등 통과

野, 반도체특별위 추후 논의 거듭
필버 사회권 상임위원장까지 확대
학교급식법·제헌절 공휴일 등 처리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 국회의장의 필리버스터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90여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업계의 숙원이었던 반도체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글로벌 반도체 강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가운데, 반도체특별법 처리로 한국 반도체 산업은 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 전력·용수·도로망 설치 및 확충,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반도체 산업 관련 기업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이견으로 여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상임위 숙려 시간이 지나 법사위의 자동부위의 된 바 있다. 당초 지난해 말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통과가 예상됐으나, 야당이 민주당 일방 추진 법안을 지연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지연 전략을 펼치며 법안 통과가 후순위로 밀렸다.

다만, 이번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법에 답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반도체 기업의 고소득 연구·개발(R&

이날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 진행 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무제한 토론 중 회의장

에 있는 의원의 수가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면,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한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

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고,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 종사자의 건강권과 안정적 급식 제공을 꾀한다.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이하에서 중위소득 130% 이하로 확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자격유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주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신고하고 경제범죄 등과 관련한 이력 등을 심사하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 처리된 법률안 중에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제헌절은 2008년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쉬지 않았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제명된 한동훈 “반드시 돌아온다”

국민의힘 최고위, 찬성으로 의결
친한계 의원들, 지도부 사퇴 촉구

국민의힘 지도부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한 전 대표는 국회를 찾아 “반드시 돌아온다”며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기다려달라고 호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의결 건을 표결에 부쳐 지도부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양향자 최고위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장 대표는 제명 의결 표결을 한 차례 연기하며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을 청구해 징계 사유인 ‘당원 계시관 사태’에 대해 중앙윤리위에 소명하라고 했으

나, 한 전 대표 측은 결과를 짜맞춰 놓고 징계하는 윤리위에 소명할 의사를 엿보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후 장 대표가 쌍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8일간에 단식 농성에 들어감으로써 둘의 갈등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장 대표의 당무 복귀 후 첫 최고위에서 제명이 결정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가 법원에 해당 의결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의 대응에 관한 질문을 받아 “당의 입장이란 것이 있을 것 없다. 한 전 대표 측에서 가처분을 신청하면 필요한 부분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최고위 제명 의결의 효력은 의결 즉시 발효됐다.

이후 한 전 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기다려 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오늘 저는 제명 당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 때 ‘팀 한동훈’으로 함께 활동하던 한 전 대표와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국면을 거치며 틀어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제1야당의 분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최고위 공개발언에서 한 전 대표를 ‘악성 부채’로 지칭하며 “특히 우리당의 악성 부채는 내일을 위한 변화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업이 악성 부채 정리를 통해, 다시 살아나듯이,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프지만, 우리당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악성 부채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제명 결정에 관한 입장 발표를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친한계 의원들은 장동혁 지도부의 한 전 대표 제명 징계가 “심각한 해당 행위”라며 지도부 사퇴를 촉구했다. 김성원·김예지·김형동·박정하·배현진·서범수·고동진·김진·박정훈·안상훈·우재준·유용원·정성국·정연욱·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친한계 의원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

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친한계가 대거 속해있는 당 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파미래는 다음주 개혁신당을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홍 기자

李 “할 일 많은데 답답… 입법·행정·집행 속도내야”

수석보좌관회의 개최
“국민 체감 정책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늦어서,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로서는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다”면서 입법과 행정, 집행 과정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정이라는 건 입법을 통해 제도를 만들고, 그 속에서 집행하는 행정을 하게 되는데 입법과 행

정 과정,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속도를 조금 더 확보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났으면서 “사실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편인데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고, 할 수 있는 역량은 제한적이어서 언제나 마음이 조급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벌써 (정부 출범) 7개월이 후딱 지났는데 객관적 평가로는 한 일이 꽤 있어 보이긴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정말 많이 부족하다”며 “집행부에서 국회 협력 요청이든, 집행 지휘든 철저

하게 신속하게 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정이라는 건 결국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국민 체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엄청나고 멋있는 것, 획기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면 실제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일상 속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를 꾸준히, 속도감 있게 시행해 쌓아가면 좋겠다. 작은 것들이 모여 큰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변화를 이뤄낸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나 중요한 건 수요자의 시각이다. 보통

공급자적 마인드가 문제가 된다”며 “그런 걸 인정하고 언제나 수요자 측, 국민의 시선으로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직접 만나 얘기를 듣는 게 좋는데 직접 못 만난다면 하다못해 커뮤니티 댓글이라도 읽어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외교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고, 정책 또는 전략의 수단으로 쓰지 않는다”며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최소한 그럴 때는 우리가 바깥을 향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같이 싸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